

# 협상결렬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농산물 관세·보조금 감축’ 대세속 일정 시간외 실익 없어, 희비 엇갈려  
‘최악상황 가정’ 대책 조속 수립, 보상원칙 수용한 선진국 타산지석으로

지난 9월 추석연휴 기간 중 멕시코의 휴양도시 칸쿤에서 열린 WTO(세계무역기구) 제5차 각료회의가 합의문 채택에 실패한 채 막을 내렸다. 회의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각국에서 몰려온 NGO(비정부기구) 대표들과 함께 회의장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던 우리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일제히 환호하는 모습이 신문에 큼지막하게 게재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의 안도일 뿐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단지 얼마간의 시간을

벌었다는 것을 빼고는 말이다. 대신에 농산물의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임을 싫던 좋던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협상결렬 소식을 접한 농민단체 대표들이 환호하고 있을 때 정부 대표단의 표정은 대조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 협상결렬의 진짜 이유 ‘아리송’

외신과 국내언론은 이번 WTO 각료회의가 결렬된 표면적인 이유를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도했다. 싱가포르 이슈는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의 투명성 등 4개 분야를 DDA(도하개발 아젠다)의 공식의제로 포함해 국제적 규범을 제정하지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이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제안을 했다해서 싱가포르 이슈로 명명됐고 선진국들은 적극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개도국들은 개별 국가별로 이룰 논의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각료회의 최종일 하루 전에 농산물수출 개도국그룹(G21. 브라질.이집트.인도.중국 등 21개국의 모임)이 모임을 갖고 싱가포르 이슈에 합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해 각료회의 의장인 데르베즈 멕시코 외무장관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이를 전해들은 미국 측이 농업협상을 먼저 논의키로 한 각료회의 안건의 순서를 바꿔 싱가포르 이슈를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토록 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개도국의 반발이 있었고 데르베즈 의장은 협상결렬을 선포했다.

이같은 진행과정에 대한 우리측 협상관계자의 해석은 이렇다. 미국은 이번 각료회의의 결렬을 이미 예상했다는 것이다. 다만 협상결렬의 공식적 이유가 농업협상이 아닌 싱가포르 이슈로 포장을 하는 것이 향후 농업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업협상의 합의도출이 가망이 없자 싱가포르 이슈를 협상결렬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협상결

렬의 이유를 농업협상으로 삼고 싶지 않을 만큼 농업협상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오덕화  
농민신문사 논설실장

### ‘조지 여’ 의장 각료선언문 조안

칸쿤 각료회의의 핵심은 역시 농업협상이다. 이번 각료회의는 농업협상의 기본골격인 세부협상원칙(모델리티)에 대한 합의를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그런 와중에서 칸쿤 각료회의 농업분야 ‘조지 여’ 의장은 농업분야 각료선언문 초안을 제시해서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농업협상의 타결을 위해 하빈슨 WTO농업위원회 특별회의의장이 2차례 제시한 초안(2월12일, 3월19일)과 이를 수정한 카스띠요 일반이사회의장이 내놓은 초안(8월 24일)이 나온바 있으나 모두 거부됐었다.

‘조지 여’ 의장의 각료선언문 초안은 칸쿤 각료회의 기간 중인 9월 13일에 앞서의 안들을 절충해 협상의 초안으로 제시됐으나 협상의 결렬로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앞으로 협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농업협상의 골격으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조지 여’ 초안의 내용에는 우리가 강력



하게 반대해온 관세상한 설정과 관세할당 (TRQ)물량의 증량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쌀의 경우 400%의 관세를 붙여 개방을 했을 때 관세상한선이 100%로 설정된다면 관세를 100%만 부과하고 이와 별도로 저율관세로 수입을 보장하는 MMA(최소시장 접근)물량도 늘려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초안에 선진국의 경우 극소수의 품목에 대해 관세상한 설정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쌀 하나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100%이상의 고관세 품목이 140여 개나 되는 우리의 경우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소득작목 모두가 치명적인 피해를 받

게 된다. '조지 여' 초안은 개도국의 경우 관세감축 폭과 관세상한 설정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품목을 인정하고 있고 보조금 감축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내용으로 우대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각료회의가 남긴 숙제들

협상이 결렬 됐다고 해도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WTO 일반이사회와 사무국이 긴밀히 협조해 올 12월 15일 안에 고위급 일반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당초의 기한내(2004년 12월)에 성공적인 협상타결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위임을 했다. 따라서 농업협상은 WTO일반이사회 산하 기구인 농업위원회에서 계속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협상타결을 위한 미국 등의 공세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협상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발휘될 여지는 별로 없음이 이번 각료회의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관세상한 설정이나 관세할당 물량증량을 막아낼 뚜렷한 방안도 없고 개도국 지위 유지도 낙관을 불허한다.

협상이 계속되는 한 협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명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반영이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대책을 수립하는 일에 조속히 착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협상의 결렬로 우리로서는 천금과 같은 시간을 벌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점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도 3년 예정이었으나 8년이 걸려 타결됐던 전례가 있듯이 이번 각료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DDA 농업협상도 2004년 말의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협상의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내대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협상의 결렬로 당장 내년에 시작해야 할 쌀 재협상이 매우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도 또 하나의 짐이 되고 있다. 관세나 보조금 감축의 구체적인 방식, 즉 세무원칙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 재협상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엄청난 위험부담이다.

쌀 재협상의 상대국이 될 미국이나 호주, 중국, 태국 같은 나라가 무엇을 요구해 올

지, 무엇을 내줘야 하는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세화 유예를 받아 내는 것과 관세화 개방을 하는 것 어느 쪽이 정말 유리한지도 불분명하고, 관세화 유예를 얻어내기 위해 의무수입물량을 얼마나 늘려줘야 하는지 모두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형국이다.

### 이제는 재계도 나서야

DDA 협상은 농업뿐만 아니라 공산품을 포함한 전 분야가 포함돼 있고 그 방향은 UR보다 훨씬 강력한 시장개방을 지향하고 있다. 협상의 타결되면 농업 쪽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반면 기업들은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다른 나라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반사이익을 누리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는 농업의 희생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일을 정부에게만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재계가 나서서 자신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농업과 농촌에 환원하는 일에 나서는 것이 정의롭고 타당한 일이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Hicks는 이를 '보상의 원칙'으로 설명을 했다. 즉 어떤 정책이 선택됐을 때 이익을 보는 계층이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계층을 지원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정부가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 이론을 수용해 계층간, 산업간 갈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음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농약정보**